

‘법인세 정상화’ 칼 빼든 국민의당

국회서 첫 공식회의...“법인세 올려 고용안정·취업연계”

안철수 “누리과정 예산 법제화해 국비로 지원해야”

국민의당이 25일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청에서 공식회의를 연 날이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중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당선됐지만, 그 후 이뤄진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세금 짜내기, 과태료 폭탄 등을 통한 ‘복지 없는 중세’였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열린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겨냥해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내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야당이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는 ‘중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논리만 되뇌고 있다”며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 없는 재정정책은 사상누각”이라고 질타했다.

박우선 최고위원은 “국민에게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고용안정과 취업연계, 생활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애초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무분별한 비과세·감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삼아왔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월17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밝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법인세의 문제점은 실효세율이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누진제가 적용되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정·관계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 최고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삭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업무추진비의 20~30% 삭감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 국고보조금 20~30% 삭감 등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박근혜통령식 고집으로 보인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국비지원 방안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민심은 독단적으로 하지말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건전화특별법 신설(방침)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또 ▲일부 대기업의 부실 처리 문제 ▲대기업 중심 사업구조 재편 방안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 ▲교육·일자

리 mismatch 해소 방안 ▲일자리 창출 및 고용불안정성 해소 방안 등 자신이 제시한 5가지 의제를 거듭 거론, “일하는 국회는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다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정부”라는 동반자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정념 민생을 살필 의지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회생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국민의당과 국회는 언제든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제회생 시급”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회생정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당체제 20대 국회’ 상임위 개편설 술술~

규모 따라 분리·통합 목소리...安, 일자리위 설치 제안

20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현재 18개 인 국회 상임위(상설특위 포함) 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성격이 다른 부처를 묶어놨거나 당치가 너무 큰 일부 위원회의 경우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분리 또는 통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만 재편할 경우, 국회의 ‘밖으로 늘리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임위를 늘릴 경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 하나만 하더라도 업무가 많은데 문화·체육·관광까지 포괄하기에는 업무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도 상임위 분할 내지 조정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국토와 교통, 환경과 노동은 서로 성격이 다른 만큼 국토와 환경을 묶는 등 상임위를 늘리거나 타 상임위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상임위 개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야당에서 재편을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있지만 상임위 개편에 긍정적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민주는 일부 상임위의

경우 성격이 다른 여러 부처나 업무가 몰려 있다며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상임위를 그대로 두더라도 법안심사소위를 늘리자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최근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에 미래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하자고 제안, 사실상 상임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이뤄짐에 따라 상임위 개편은 야권의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일부 상임위는 조정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어서 부분적인 상임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당헌 손질해 대선판 재구성?

당권·대권 분리 규정 폐기...후보 기근 난국 돌파

외부 영입론 주장도...‘반기문 대망론’ 현실화 가능성

새누리당 내에서 내년 대선 대비를 위해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당권·대권 분리 원칙은 지난 2005년 11월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당헌 93조)는 규정을 신설하며 만들어졌다.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제는 지금은 4·13 총선 참패로 여론 내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치명타를 받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25일 “지금 당권과 대권 주자를 견제할 때가 아니라 대 표를 지지를 통해라도 대권 주자를 키울 시기”라고 말했다.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누구라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권 주자 기근이라는 현실에 숨통을 트자는 생각인 것이다.

이와 맞물려 당 대표도 야에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예 정대로 7월 이전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권·대권 분리 폐지와 당 대표 추대를 합칠 경우 당장 반기문 유엔사무총 장의 당 장악과 대권 주자설도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된다. 올해 말 입기를 다 하는 반 총장은 당내 기반이 전혀 없지만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후에 외부 명망가 영입으로 당 대표에 추대될 수 있고, 아울러 총정권 출신으로서 대 권까지 단박에 도전할 수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K도 박대통령에 등 돌렸다

부정 평가 63.5%...지지율 31.4% 최저치 다시 갱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대구·경북(TK)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가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2월 첫 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8~22일 전국 성인 유권자 2536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3.1%p)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였던 지난주보다도 0.1% 포인트 하락한 31.4%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2%포인트 상승한 63.5%로 지난 주에 이어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TK에서 ‘잘못한

다’ 49.2%, ‘잘한다’ 46.6%를 기록,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보다 1.1%포인트 상승한 31.5%로, 새누리당(28.1%)을 오차 범위에서 앞서며 선두를 지켰다. 국민의당은 0.2% 포인트 하락한 23.7%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보다 2.3%포인트 오른 27.0%를 기록, 15주 연속 선두를 수성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0.5%포인트 하락한 18.4%로 2위를 지켰고, 여권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3위(9.6%)에 머물렀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선관위, 오늘부터 선거비용 고강도 실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출마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 고강도의 실사에 나선다. 선관위는 25일까 지 후보자들이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마감하고 6월30일까지 불법 사용 사례가 없는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

재·위조·변조·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 이다.20대 총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후보는 1인당 1억7800만원, 비례대표는 당별로 총 48억1700만원이 다. /박지경기자 jkpark@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컨설팅 전문업체

지오옥션 경매 컨설팅

20년경력의 부동산 컨설턴트 성실한 상담

- ★ 공장 나주시 오량동 단층 및 2층공장, 대지5,735㎡ 건물3,965㎡ 동수오량농공단지내 ▶ 감평가 34억6천7백, 최저가 15억5천5백 (감평가의45%)
- ★ 공장 화순군 동면 단층 및 2층 미곡공장, 대지6,844㎡ 건물1485.8㎡ 연동마을 인근 ▶ 감평가 13억2천만, 최저가 4억7천3백 (감평가의36%)
- ★ 공장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전통식품공장, 대지7940㎡ 건물3502㎡ 단층 및 3층 ▶ 감평가 24억9천4백, 최저가 4억2천
- ★ 공장 광안구 안청동 하남산단내 대지5,940㎡ 건물5872㎡ 단층 및 2층 ▶ 감평가 57억6천8백, 최저가 57억6천8백
- ★ 나주시 경현동 지하1층~지상3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원리유원지부근 ▶ 감평가 30억6천5백, 최저가 8억7천9백 (감평가의29%)

※ 전지역 병원, 사우나 매매, 매입 상담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조여사 010-6211-4585

채용 공고

- * 경매투자에 관심있는분
- * 부동산 배우면서 일할분
- * 공인중개사
- * 열정과 소신이 있는분
- *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분
- * 자격증 소지 무관

지금 도전하세요!!

T. 062-714-2251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수익성 부동산 다량 보유

- ★ 광안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기업은행뒤 대지 479㎡, ▶매매 5억8천만 (조정가)
- ★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매매 2억2천만 (조정가) 현 주자장
- ★ 근린시설 남구 주월동 지하1층, 지상8층 대지 3752㎡ 남구청 부근대로변 ▶ 감평가 35억4천4백, 최저가 35억4천4백
- ★ 근린시설 동구 동명동 8층 건물 대지 700㎡ 건물 2005㎡ 왕복 4차선전 ▶ 감평가 19억6천, 최저가 19억6천
- ★ 의료시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입구, 대지 11,546㎡ 건물 5,733,24㎡ 대로변 ▶ 감평가 48억8천6백, 최저가 48억8천6백

※ 전국 물건 매입 ※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공태풍 010-3820-8151

T. 062-714-2251

NPL채권 전국 물건 상담

이주원 국장 010-7171-7610

권리분석, 수익성 상담

강천구 이사 010-6838-6008